

호남권 역사 수장고 '국립나주박물관' 15일 첫 삽 발굴·조사과정까지 전시...400억원 투입 친환경 뮤지엄 파크로 영산강유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보존·관리할 '국립 나주박물관' 기공식이 오는 15일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에서 열린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국립 나주박물관 기공식에는 유인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인기 의원,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임성훈 나주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물관 건물은 지역의 음관묘를 형상화한 것으로 부지 8만9869㎡, 지하 2층·지상 1층의 연간평 1만1086㎡에 전시실과 수장고·강당·아외 전시장 등이 조성되며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2년 완공될 예정이다. 국립 나주박물관은 영산강유역의 독특한 고분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남지역의 고고역사 전문박물관으로서 발굴조사에서부터 전시, 조사 연구의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수장전시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상설전시 공간이 지난 계획을 벗어나 체험을 통해 관람객과 유물의 소통을 강화, 문화재를 좀 더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국립 나주박물관 수장고는 호남지역에서 출토되는 발굴매장문화제를 종합적으로 보관·관리하는 권역별 수장고·건립의 첫걸음으로, 완공되면 자미산과 신촌리, 대안리, 덕산리 고분군 및 시종에서 남포를 연결해 우리나라 삼한시대 마한에 속했던 영산강유역에는 대형 옹관묘로 대표되는 독특한 문화가 형성됐고 산과 해안, 평야가 어우러진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다양한 풍속과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국립 나주박물관은 이러한 영산강 유역을 비롯한 전남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그 가치를 우리 역사 속에서 재평가하는 중주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국립 중앙박물관 최광식 관장은 "국립 나주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이 계획하고 있는 권역별 수장고·건립의 첫걸음으로, 완공되면 자미산과 신촌리, 대안리, 덕산리 고 국립나주박물관 조감도 라 최대의 국가적 고분군을 망라하는 친환경 뮤지엄 파크를 조성하게 된다"며 "영산강유역을 대표하는 중주 관광자원으로 지역민뿐 아니라 국내외 관람객에게 다양한 역사와 문화적 향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부최재봉부=최승렬기자 srchoi@ 국회 1박 2일 폭력대치 '예산전쟁' 뒷얘기 회제 지난 7일부터 1박2일간 국회 본회 의장단 앞에서 벌어졌던 여야의 '예산전쟁'의 뒷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 장례 기간에 올지 않았던 박지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예산안이 통과될 때부터 규탄대회, 비상 의원총회 때까지 하루에 3차례나 눈물을 보였다. 박 원내 대표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에 직접 참여했다. 박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 개회전, 자신을 '태평그룹 로비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내가 대놓고 몸통이니'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진 의원이 황급히 몸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에서 '해결사'로 통하는 육사 럭비부 출신의 김성희 의원은 민주당 강경파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김 의원이 의장석 탈환을 위해 다가오자 민주당 486 의원들이 자리를 비켜며 몸을 사렸을 정도라는 것. 또한, 운동권 출신의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김성희 의원에게 '한방'을 맞고 반격을 하려던 강기정 의원을 끌어안고 '참으라'고 설득,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도 드잡이를 하다 실신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를 본회의장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도운 것도 한나라당의 한 남성의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조선 의원은 당직자로 오인되면서 본회의장에 들어서지 못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한편, 이재오 특임장관은 10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공개 사과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낮 박 원내 대표의 트위터에 '예산안 강행처리 시 대표님이 화풀이하러 왔을 때 제가 여유있게 웃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다. 제 수양의 한계'라며 '화난 마음 풀어주길 바란다'고 글을 남겼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예산안 날치기 통과' 규탄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예산안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도 합의시 軍 비행장 무안이전 가능" 공군,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주민대책위 질의에 공식답변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군 공항이 군 공항으로서 기능발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광주시와 전남도 간 이를 합의한다면 광주기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또 항공기 소음과 관련, 지역 주민의 고충을 수렴하고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장비고를 설치하고 비행 훈련시간 조정, 비행경로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위해 국방부 주주관으로 '군 소음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와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는 10일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광주공항 전투비행장의 무안공항 이전 여부를 묻는 질의에 최근 공군 측이 공식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군은 답변서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 2008년 국방부 주관으로 수행한 '광주 군 공항 종합발전방향' 연구용역 결과 무안공항이 군 공항으로서 기능발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광주시와 전남도 간 이를 합의한다면 광주기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또 항공기 소음과 관련, 지역 주민의 고충을 수렴하고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장비고를 설치하고 비행 훈련시간 조정, 비행경로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위해 국방부 주주관으로 '군 소음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광주공항의 국내선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군 공항 이전문제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국강원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문제는 매우 형식적인 논의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이라며 "공군의 입장이 나온 만큼 광주공항 문제와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공항의 무안 이전에 전남도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최근 광주시가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군이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와 전남도에 군 공항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며 "국내선 이전 문제가 가로막고 있어 군 공항은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회 경위, 폭행 강기정 의원 고소 8일 국회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국회 경위가 자신을 폭행한 민주당 강기정(46)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9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국회 의사당 소속 경위 A씨는 공무수행 도중 강 의원에게 차내 안면을 얻어맞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회폭력 사태를 펼친 환면에는 여당 의원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한나라당 김성희 (54) 의원의 주먹에 얼굴을 맞은 강 의원이 분을 참지 못하고 근처에 있던 A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번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당시 A씨는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으로 알려졌으나 본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국회 경위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日만정 - 김종우 대단하다 전통은 살아있다 전남도, 저소득층 '문화 바우처 사업' 확대 올해보다 5배 늘어난 24억 확보...대상자 28.4% 혜택 전남도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관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문화 바우처 사업' 예산으로 24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5배 늘어난 규모다.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 바우처 사업은 복권기금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남도가 설립한 (재) 전남문화예술재단에서 주관한다. 올해는 복권기금 3억2700만원을 지원받아 1만4000여명에게 혜택을 줬으나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자 지방비 7억원을 포함해 모두 24억원을 확보했다. 도내 문화 바우처 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10만7000여명과 차상위계층 6만2000여명 등 모두 16만9000여명으로 올해까지는 전체 대상자의 8. 2%만이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7배 이상 늘어난 28.4%가 해당한다. 도는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서만 회원가입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수혜 대상자를 직접 방문, 홍보하고 개인별로 문화카드 발행 등 보다 다양한 회원 혜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 바우처 사업 이용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홈페이지(www.cvoucher.kr)에 회원가입 후 주어지는 5000포인트 한도 내에서 관람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해 예매하면 된다. 5000포인트는 현금으로 5만원에 해당하나 공연단체의 50% 할인으로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시·설 청렴도 추락, 광주시·전남도 각성해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해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16개 시·도 가운데 지난해 1위에서 금년에 5위로 4계단이, 전남도는 4 위에서 12위로 무려 8계단이나 추락했다고 한다. 반면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보다 무려 11계단 뛰어오른 2위에 올랐고, 광주시교육청은 8위에 머물렀다. 광주시는 이번 조사 결과, 민원인들 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와 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에서 각각 5위를, 전남도는 외부청렴도가 9위이나, 내부 공무원이 평가한 청렴도는 13위에 그쳐 '미흡'으로 분류됐다.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공직사회에 기강이 힘들어하고 취약한 도덕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외부청렴도의 하락은 민원인들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 부정과 비리, 근무 태만 등이 늘었다는 얘기다. 또 내부청렴도의 추락 역시 조직 내 인사와 행정업무 처리 등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집행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무원들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주민의 공복(公僕)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곧 시·도민들의 얼굴에 멱칠을 한 것이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많은 선량한 공무원들을 짐작해 폐실했다고 볼 수 있다. 공직사회가 청렴해지려면 무엇보다 공직자의 각성이 중요하다. 더불어 비리공무원은 금액과 지위에 관계없이 그 직책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나,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시민과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청렴도가 높은 자자체의 공통점이 반부패 정책을 강도 높게, 그리고 부단히 펼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 이에 따라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자치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통장 등을 동원해 모금을 강요하는 사례가 반복하고 있다. 모금회가 반강제적 모금활동을 부추기는 셈이다. 춥고 그늘진 곳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운정의 손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외부청렴도의 하락은 민원인들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 부정과 비리, 근무 태만을 예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웃돕기는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강제성을 떠나는 안 된다. 공동모금회도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고양하기 위해 공익법인으로 출범한 것이 아닌가. 지금과 같은 반 강제적 방법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구에 지원하는 금액을 모금 실적과 연계하고 있는 것이 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웃돕기는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강제성을 떠나는 안 된다. 공동모금회도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고양하기 위해 공익법인으로 출범한 것이 아닌가. 지금과 같은 반 강제적 방법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구에 지원하는 금액을 모금 실적과 연계하고 있는 것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양상은 광주공동모금회 측이 자치구별 모금액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돌이킬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구에 지원하는 금액을 모금 실적과 연계하고 있는 것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구간 경계조정 대책위 구성하자" 광주시의원들 지역현안 대안 촉구 버팀목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광주은행이 원래 주민인 지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손제홍 의원(민주·동구 2)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간경계조정과 관련해 "광주시가 추진해온 각종 외교지역의 택지개발 정책, 도심지에 대한 재투자 부관심 등으로 구도심은 급속한 상주인구 감소와 공동화를 초래했다"며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를 막고 구간 균형발전을 위해 구간 경계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조호진 의원(민주·북구 5)은 이날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해 "지역발전이나 은행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수의창출에만 혈안이 돼 있는 재무적 투자자인 미국계 펀드와 호주의 은행 등 외국자본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지역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광주은행이 지역 경제의 면서 시너지 강화를 위해 사업부 산하 세트 사업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했다. 생활가전사업부 광주사업장의 경우 프리미엄 가전 및 에어컨 생산기지로 육성된다. 생활가전사업부는 현 흥창와 삼성광주전자 사장이 그대로 맡는다. 하지만 현재 6개인 삼성광주전자 임원은 내년 1월1일 삼성전자와 합병으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옥기자 jwpark@kwangju.co.kr 삼성광주전자, 생활가전 광주사업장으로 삼성전자 시너지 강화